



**난가폭락 방지하면 안된다.
채란업 총체적 부실 초래**

설마했던 계란가격이 1개월 이상 생산비는 커녕 사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여 서서히 채란업을 포기하거나 부도를 내는 농가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난가 폭락의 주원인은 이유야 어쨌든 소비보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가 급감하기 시작한 지난 '97년에도 채란업자들은 부채로 인해 장래가 불투명함을 예견하면서도 시장규모에 맞는 공급조절을 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지난해말 국가 금융위기로 경제 흐름

이 엉망이 되어 소비는 약 30% 이상 급감하는 데도 계절적인 소비증가에 힘입어 난가가 상승하자 생산량도 따라 증가한 결과가 급기야 채란업을 총체적 부실로 이끌고 말았다.

연중 계란소비가 가장 낮은 때를 맞이하였다. 엘니노 현상으로 예년보다 기온이 1개월 이상 빨리 높아져 유통되는 계란의 신선도에도 적잖은 문제가 노출되어 계란 소비는 더 악화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걱정이 되고 있다.

채란업은 생산조절을 할 수 없는 구조하에 놓여 있는데 계란 생산은 계속 과잉의 소지를 안고 있어 부도상태에 놓인 채란농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난가가 나빠도 일정기간을 설 수도 없는 것은 채란업이 이미 장치산업화 되었기 때문이고,

부채율이 높아 계속 농장을 가동시켜야 하기에 많은 농가들이 함께 부도사태까지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채란업의 생산감축 필요성은 이 난을 통하여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긴 설명은 접어두겠지만 채란업이 이대로 방치가 된다면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채란인들은 정부가 무엇을 해줄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이미 촉발기금이 고갈되어 위기 극복에 투입할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정기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황을 타개할 대안을 만들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진정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는 반갑잖은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당분간은 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제 남은 것은 자율적인 생산량 감축이다. 기반붕괴의 공동화 현상을 막으려면 가장 문제되는 과잉생산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어렵지만 IMF시대에 계란이 동물성 단백질을 획득할 수 있는 우수한 식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서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두가지 길 뿐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채란인 모두에게 내려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

양계산물 수출 방향 국익차원에서 검토해야

양계산업의 외형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수출에 대한 관심이다. 정부도 과거와는 달리 외화를 획득하는 기업이나 산업을

적극 뒷받침해 주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수출이란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담보상태에 있는 국내 양계산업에 기반확대를 통한 활력 증가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안정성 확보의 검증이다.

양계업은 국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계란과 닭고기를 자급하고 남을만큼 여력을 가지게 되었다. 공급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다기보다 과잉이 되어 늘 농가를 불안케 하고 있어 수출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수출에 뛰어들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체도 있어 가능성은 밝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이다. 품목도 매년 다양해져서 원료로서의 기능과 완전가공품까지 갖추어 정부나 업체에서 방향만 제대로 설정하면 양계업도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여겨진다.

그러나 수출성과를 일구어 낸 업체들의 말을 빌리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투식 방법이라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정보제공 창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향설정에서 무리하게 밀어내기식 목표는 자칫 화를 부를 가능성이 있어 이익이 추구되지 않는 수출은 지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계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근 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장미빛으로 볼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신선육보다 가공 원료육으로 한정되고 있어 우선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비싼 것이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높은 생산비를 보조하여 수출을

장려한다는 것은 국의 차원에서 재고가 되어야 한다. 원료는 비싸지만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품으로 수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과잉이 되어 수매비축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보조하여 수출하는 것이 득이 된다면 몰라도 계속 수출이라는 업적에 치중하여 장려를 한다거나 지원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정책은 의미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
농림부 일원화로 축산업 발전
기대**

수년간 줄다리기 끝에 농림부로 다시 이관된 축산물 가공업무가 지난해 법개정을 마치고 12월 13일부로 공포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4일부터 과거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직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지만 축산인들이 바라는 것은 축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림부가 축산물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급되는 축산물이 원료로부터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종전보다 수준을 높여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점이다.

물론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저절로 축산식품의 품질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된 농림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창의

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다.

그간 축산물 위생처리법은 지도보다는 감독에 비중을 두어왔다. 관련업 종사자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행정편의, 실적위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물의 가공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도계장만 하더라도 탈모과정은 농림부가, 부분육 및 가공은 복지부가 관장하다보니 같은 공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정에 대한 업무 관장부서가 달라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또는 인력낭비를 초래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행히 농림부와 축산업계의 노력으로 업무가 정상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장차 전개될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결코 안된다.

법집행을 이전처럼 편이나 안면, 또는 권위에 따라 원칙없이 해나간다면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 업계나 농림부는 축산물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예전보다 더 고통이 따른다는 각오로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축산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안전성도 확보될 수가 없다. 아무리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된다해도 지켜야 할 대상의 입장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발전목표가 서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매년 축산물 가공식품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낙후된 축산 가공업을 발전시켜 축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한계극복에 정부나 업계가 다같이 힘을 모아 시행초부터 튼튼한 다리를 놓아갔으면 한다. **양계**